

# ‘국립 의대’ 설립 무한경쟁...전남도, 공모로 대학 선정

김영록 지사 “대입 일정상 통합 추진 어렵다”... 1개 대학에 설립 결정  
2026년도 신설·200명 규모 신청...목포대·순천대 공모 공정성 과제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동안 추진했던 통합 의대 방침을 대학 간 공모 방식으로 변경, 단일 의대를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단일 의대를 주문하고 있는데다 현 정부내에 의대 설립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서둘러 정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 담화문을 내고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통합 의대 추진 방안의 경우 오는 5월 이뤄질 2025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 공간·실습 자재, 교수 인력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오는 5월 학교별 의대 모집 인원 등을 조정할 뒤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인원을 전남 신설 의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전남의 단일 의대 설립 방침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다음달 대학별 정원을 담은 대입 전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국립 의대는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시기·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의대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대학 안팎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계획에 배정 인원이 담겨야 하는 만큼 공모 결과는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감소전문병원과 전남 의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농촌·도시·산간 지역뿐 아니라 산단과 도시 취약지역 도민들 모두 의료혜택을 받는 건강권 보장 ▲지역의 상생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국

립의대 설립 ▲공신력 확보를 통한 대학 선정 등의 공모 기준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역 상생과 협력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통합 의대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난 1월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국립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지역 간 분열·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공모 진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전남도는 당초 공모 진행 기관을 선정해 밝힐 예정이었으나 접촉한 외부 기관들이 난색을 표해 우선 공모 방침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목포지역에서는 김 지사의 공모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목포지역 전남도의회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갈등을 우려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말하던 지사의 갑작스러운 공모 절차 추진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목포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목포대 의대 추진담당도 “전남 의료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남도가 통합의대 추진이 어려워지자 외부기관에 전남 의대 입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은 입지 선정에 대해 전남도만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 설립을 신청하기 위한 지자체의 공모 권한이 없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제주 의대가 신설되며 정원이 늘어난 지난 1998년 이후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 등으로 지사에게 의대 설립을 건의하도록 한 만큼 공모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 의대 신설이 확정된 만큼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전남을 주시하는 만큼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의대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투표합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자전거 동호회 ‘에코바이크’ 회원들이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

총선 투표 의지 높아져 ... 총 9만2923명 투표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총 9만2923명(62.8%)이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4만7647명(투표율 62.8%), 미주 2만6341명(56.5%), 유럽 1만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역대 총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재외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코로나19 상황으로 투표 참여가 어렵고,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국가도 있어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투표율은 총선보다 높은 편이다. 역대 대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 등이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돼 오는 10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경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

## 투표날 일하는 사업장 ‘투표 시간 청구’ 가능

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표 시간 보장’ 관련 안내 공문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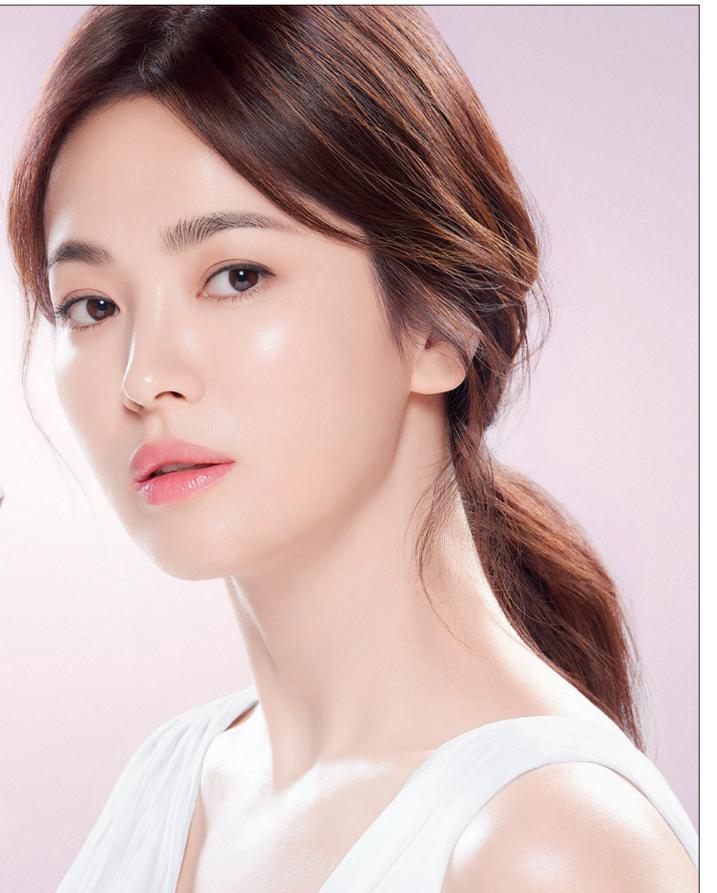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5·18 계엄군 성폭력 전모 드러났다 ▶7면
- 이정후 2인타 '3할 타자' 등극 ▶18면
-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 이명현 천문학자 ▶22면

###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